

## 목차

- A. 미디어비평
- B. 토론
- C. 추가

## A. 미디어비평

### 가. 미디어오늘

#### - 정치 뛰어든 조국 향해 “검찰개혁 망친 이가 검찰개혁? 적반하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을 선언하자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논란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자녀입시비리 최강욱 인턴활동 확인서 위조 및 행사, 조민 의 장학금 금품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후 발언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졌으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상고 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다”며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찢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정치 전면에 뛰어 들었다.

이를 두고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과 전화연결에서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 2심에 유죄가 나오셨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그건 잘 모르겠다”며 “기왕에 하신다니 잘되길 바라지만 조금 민주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한번은 판단해주셔야 할 일”이라며 “조국 장관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혹독한 수사를 받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망친 주범 격인 사람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창당을 선언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금 위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 특수부가 가장 최대 규모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조국 민정수석 시절이며…검찰 주요 포스트에 윤석열, 윤대진, 한동훈 등 특수통들이 전진 배치된 것도 전례가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인 입으로, ‘검찰의 특수수사는 잘 하고 있으니 유지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어쩌면 이렇게 180도로 입장을 바꿀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금 위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김우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총선 출마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심에서도 이어진 유죄 판결에도 조국의 반성도 없이 ‘비사법적 명예회복’이라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내세우며 총선에 뛰어 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근부대변인

은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언급은 정치적 신뢰와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원칙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우러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국 신당과 선거연합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기류와 달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현실 정치 참여 선언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그동안 온갖 고초를 잘 견뎌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고 썼다.

## - ‘86 운동권 청산’은 친일파 논리? 한동훈-홍익표 논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론’을 두고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폄박했던 친일파 논리와 같다고 밝혀 논란이다.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도 논란이 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86 청산론을 두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며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느냐. 뭐 한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관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며 “친일파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전문관료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과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지금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 세력,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홍 원내대표 언급을 두고 “만주에 독립운동하던 분들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받았던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용기내서 헌신했던 것 아니냐”며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운동권 특권세력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독립운동가들과 같느냐”고 반문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 분들이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들에 쌍욕했느냐”며 “뭐가 비슷하다는 거냐. 좋은 건 자기들끼리 다해먹고 있지 않느냐. 만주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도 않는 비유를 하다 보면 그 분들을 (스스로) 자꾸 폄하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듣고 재반론을 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살롱에 가서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이다. 자기 고백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 1순위”라며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룸살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느냐. 정치검찰들이 많이 갔느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쌍욕은 잘 드러났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권력에 빌붙어서 인권과 정의는 버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 데에 협력해 온 정치검사들이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 ‘서울의 봄’ 흥행에 울상이던 여권, ‘건국전쟁’ 흥행에 반색?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찬탈 과정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에 성공하자 야권은 현 정부의 검찰 독재 행태가 하나회와 비슷하다며 이슈 물이에 나섰다. 반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그린 '건국전쟁'을 놓고 여권이 공세 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의 봄'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연상케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여권은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를 해체한 공적이 있다고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의 봄'은 전두환 쿠데타를 정면으로 조명하고, 3당 합당 이전의 민주정의당과 국민의힘의 연관성 때문에 여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다.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가 '오버랩'되는 효과를 내면서 여권은 '서울의 봄'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의 봄'을 관람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검찰총장이 여야의 갈등 한복판에 뛰어들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화 관람 후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검은 이 총장이 사법연수원 시절 구속된 전두환과 노태우 공판을 방청하고 기고한 글까지 소개했다. 이 총장은 "전두환 씨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외쳐야 한다. '성공한 내란도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썼다. 여권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서울의봄 관람에 불편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 봄이 오려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영화 '서울의 봄'을 적극 활용했다면, 여권은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흥행에 반색하며 반격을 가하는 모양새다. 현재 '건국전쟁' 누적 관객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다큐멘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흥행으로 볼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건국전쟁을 관람하면서 대중의 관심도 집중됐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전쟁'에선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이승만의 '업적'을 평가하는 연설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권 지지층 결집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언론이 일제히 '여당의 건국전쟁 띄우기'로 타이틀을 달고 보도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도 공방의 중심에 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운동권 청산론) 이게 꼭 마치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위원장은 13일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림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 했나"라고 비꼬았다.

한미 정재계 인사들이 건립 추진 모임을 발족하고, 주미 한국대사관 앞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는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이승만에 대한 우호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동상 건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건국전쟁' 흥행은 호재(好材)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헌법 전문에 불의(不義)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 명시돼 있다며 부정 선거를 일으킨 이승만을 동상으로 세우는 건 헌법 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건국전쟁' 이슈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의 봄' 당시 여권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얼마나 심했나"라며 "지금도 오히려 민주당이 '건국전쟁' 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떠한 대통령이든 공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과감하게 인정해도, 보수우파 진영의 과몰입으로 몰아가도 공격받는 건 결국 민주당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건국전쟁'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과 현상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도 정치권 공방의 소재로 떠올랐다. '살인자ㅇ난감'에 등장하는 '형정국'이라는 인물은 비리를 저지르는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나온다. 영화에서 형정국이 백발에 안경을 끼고 있어 생김새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슷하다는 얘기부터 형정국의 죄수번호 4421번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 4421억원과 숫자가 같다는 내용까지 논란이 됐다. 넷플릭스 측은 특정 인물과 관련이 없다

는 입장을 냈지만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원작에 없는 내용을 연출했다고 비난하거나 반대로 이 대표를 풍자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 중이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령 비리와 초밥, 4421과 ‘형지수’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연상하든, 사고의 회로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문화계의 좌편향 강요도 이제 시정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 가. 미디어스

### - KBS 감사, 박민 사장 '감사방해' 특별감사 예고

KBS 감사가 박민 사장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욱 감사**는 이번 인사가 일반감사·특별감사 중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감사방해’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13일자로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겸직하는 자리에 박상용 씨, 기획감사부장에 김동진 씨, 방송감사부장에 임수연 씨, 기술감사부장에 정기태 씨를 인사발령했다. 앞서 박 감사는 감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인사발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사장은 인사를 단행했다.

**박 감사**는 이날 KBS 내부게시판에 올린 입장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 집행부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실 부서장들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강행은 감사 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며 중대한 감사 방해행위다. 이번 부당한 인사 발령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감사는 이번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박 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감사는 ‘**KBS의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의 인사권은 무소불위가 아니라 법령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절차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는 인사규정, 취업규칙, 감사직무규정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에게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박 감사는 ‘**감사의 독립성과 감사 보조기관의 인사는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 업무상 불가분의 관계인 감사와 감사실을 억지로 구분해 ‘감사보조기관’인 감사실 인사는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강부회’”라며 “그래서 법령과 규정에서는 감사담당자의 요건을 명시하는 한편,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자 중 ‘감사가 인정하는 자’로 임용하도록 감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자질·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감사직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은 ‘감사가 감사부서의 직원으로서 적당하고 인정하는 자’이며 결격사유는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이다.

박 감사는 ‘**감사와 이번 인사발령에 대한 충분한 협의 기간을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 “경영진은 처음부터 단수의 인사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박 감사는 “또 해당자에 대한 판단과 검토를 위해서 근평 결과나 징계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본 감사는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제공받지 못했다. 이는 협의가 아니라 일방 통보”라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이번 인사는 인력순환 정책에 따른 정당한 인사이며 인적 쇄신을 위한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독립기관인 감사의 보조기관인 감사실을 갑자기 무슨 이유로 쇄신해야 하는 것인지 감사에게 설명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감사의 의견에 반한 인사를 강행하면서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감사실을 쇄신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 - 윤 대통령, 언론사 간부 간담회 추진…일부 매체는 '불참 고려 중'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과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됐지 않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매체는 불참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12일 저녁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는 '윤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간 간담회를 검토 중'이라는 채널A [단독]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을 취재했는데, '채널A 기자가 쓰면 거의 100% 맞다(고 한다)'며 다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장윤선 기자는 "85개사나 되는 출입기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거냐, 나눠서 할 거냐,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을 거냐,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등 이런 고민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윤선 기자는 "(윤 대통령)신년 회견도 안 하고, KBS 하고 녹화 형식의 대담으로 끝냈는데 보이콧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매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인(간담회)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판단을 미룬 매체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하면 좋다.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 자유롭게 일문일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그게 바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장윤선 기자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야 했다"며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대담에서)윤 대통령이 예상 질문 올리지 말라, 묻는 대로 다 답변했다는 것이잖나, 그러면 생방송으로 기자들 불러다 기자회견을 해서 나올 질문 안 나올 질문 다 털어놨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나, 신년 그것도 1월 다 지나서 그 이상한 형식의 미니 다큐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채널A는 10일 <[단독]대통령실, 언론 접촉 늘린다…간담회 추진 검토>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간 간담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윤 대통령은)KBS와의 신년 대담 발표 당시 추가 언론소통 방안을 고민하겠다 밝혔는데 그 일환"이라고 전했다.

채널A는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언론사 간부들과도 별도 간담회 자리를 갖고 소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89개사에 달하는 만큼 참석사 범위 등을 놓고 그 기준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 조선일보 전 고문 "보수 가치 잃으면 공정한 언론 무슨 의미 있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전 고문)**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보수언론이 대통령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인의 경솔함에 집착하는 것은 가치 전도적"이라고 했다. 설 연휴가 끝난 13일, 보수언론 지면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다룬 기사와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녹화 대담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해명이라는 언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대담 방송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설날 재방송한 KBS를 향해 "심기경호 방송이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13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더 비판해야 하나?>에서 지난달 자사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다룬 기사 <권력 비판에 성역 없어…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더 날카롭게 비판해야>를 거론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보수 언론 시각에서의 보수 정권 비판은 정부·여당에 보다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교과서적(的)으로 말해서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라며 "그 대상인 권력이 우파건 좌파건 상관이 없고, 언론이 보수적이건 좌파적이건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과거 보수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조종동' 보수·우파 언론이었고, 이는 좌파 정권의 득세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좌파 언론은 좌파 권력을 비판하지 않고 이에 대한 비판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보수 정권은 좌파·보수 언론의 비판과 비평가·관전자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하는 '동네북'이라는 게 김 칼럼니스트의 주장이다.

김 칼럼니스트는 '디올백 사건'에 대해 보수 언론이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연 집권 2년 차 윤 정권에 타격을 줄 만큼의 정치적 사건인가"라며 "(이번 총선의)판단 준거는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과 안보·국방의 방향 설정, 국민의 경제적 삶이지 대통령 부인의 '백' 수수여서는 우리 수준이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보수를 비판하는 것이 보수 언론이 좌파 언론과 다른 장점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론에서 보수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인의 경솔함에 집착하는 것은 가치 전도적"이라며 "보수 언론의 행태가 앞으로 또 다른 5년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중략)가치를 잃으면 공정한 언론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칼럼니스트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많은 국민의 관심 아래 상영 중이다. 모처럼 광의의 보수 언론이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디올백 사건'이 그 흐름을 막는 보(淤)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조선일보 1면에는 <이승만의 삶 재조명... '건국전쟁' 24만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김 여사 이해해달라며... 왜 우리에게 박절한가?>, <설 밥상 오른 김건희... 야 "국민 분노" 여당서도 "답답">** 등의 기사를 실었다.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은 윤 대통령의 KBS 대담을 보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는 국운이 뻗치려나 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설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왜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대담으로 '김건희 문제' 유아무야해선 안 된다는 게 설 민심>에서 '설 연휴 밥상에 오른 민심의 소리는 단연 민생이었다'는 국민의힘 논평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며 민생을 부각시키려는 바람이 담긴 논평"이라며 "설 연휴기간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민생도 챙겨야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을 적법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본수사를 진행할 기미를 보이는 대신 검찰은 오히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도 신고 접수만 했을 뿐 기초적인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이 문제를 적법하게 풀지 않는 한 민심은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김희원 뉴스탠다드실장은** 칼럼 <이러려고 청와대 나왔나>에서 "윤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은 안 하느니만 못했다. 전 국민 욕받이였던 크리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만 득 봤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정치 공작"으로 선을 그은 대담 이후 디올 백은 검찰·국민권익위 조사는커녕 여당에서 말도 못 꺼내는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정말 이게 끝이라고 믿는 걸까"라고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 부부가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런 성정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하루 3명꼴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기업만 걱정한 윤 대통령을 지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갖은 무리수를 두면서 청와대를 나온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이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심기를 경호하는 구중궁궐이 돼버렸다"고 했다. 김 실장은 "디올 백 논란을 돌파하려면 듣기 싫은 모든 질문에 답하고 사과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비판을 들을 용기, 불편한 국민을 만날 용기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겨레 김영희 편집인은 칼럼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서 "이번 대담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 '수렁'에 빠졌음이 분명해졌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김 여사 문제는 계속 호출될 것"이라며 "김건희 악재"를 딛고 여당이 이긴다면 당은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더 가속할 것이고, 야당이 이긴다면 두말할 나위 없다"고 했다.

김 편집인은 "고백하자면 그간 김 여사의 처신이 논란이 될 때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논문 표절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까지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이 선택했다는 사실의 무게도 있거니와, 그에 대한 비판에 여성 비하적 시선이 깔려 있다고 보일 때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는 복잡한 다름을 거쳐야 하는 '의혹'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영상으로 목격한 사실이다.(중략) '진정한 사과'는 대통령의 공적 판단 능력을 가능할 수 있는 최소치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실 <'대통령 대담' 재방송까지 한 KBS, 부끄럽지 않은가>에서 "공영방송이 공공 자산인 전파를 낭비해 가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방송은 '국민의 방송'인가, '대통령의 방송'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KBS는 지난 8일 윤 대통령과의 특별대담이 최고 시청률 9.9%를 기록,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다. 설날 0일 오전에는 특별대담을 재방송했다. 한겨레는 "설날 차례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겨냥했음직하다"며 "대통령의 변명과 해명을 어떻게든 많은 국민에게 들려주려 안간힘 쓰는 모습에서 정치권력에 순치된 '국영' 방송의 민낯을 봤다고 하면 지나칠까"라고 했다.

한겨레는 "'친윤 낙하산'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 한국방송은 빠르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가고 있다.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도 국정홍보채널 케이티브이(KTV)에 빔대는 평가가 나온다"며 "박 사장은 취임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정성을 훼손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어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영남·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진행돼 '일방적인 정책홍보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동아일보는 "야권에서는 '총선용 정책홍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간담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경제 등 분야별 언론사 간부들과도 별도 간담회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대통령실이 고민하는 다양한 언론 소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B. 토론

### 1. 조국 창당

13일,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오는 4월 총선 출마 여부와 방식에 대해선 ‘창당 후 당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그는 지난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놓고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은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 - 1면, ‘2심 실형’ 조국, 결국 총선 등판

조 전 장관은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명분으로 언급했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야권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상기시킬 수 있고, 사법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한반도 평화 위협 등을 나열한 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손준성 검사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올린 사진 60장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면 좋겠다”며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 여러분이 조국”(권성동 의원)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전 교수가 주장하는 국가위기 극복은 이런 저급한 정치를 심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조 전 장관이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얘기했지만 조기 종식에 도움이 안 되고 잘못하면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찰 안 하고, 반성 안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되고 문재인 정권 교체 이유를 상기시킬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전선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며 “조국 사태가 불거진 게 2019년 하반기였고, 이것이 내내 영향을 미쳐서 20·30(세대) 이탈의 한 원인도 됐고, 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중도, 부동산층 확장 면에서 (민주당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한겨레

##### - 3면, 조국 “검찰독재 종식” 창당 선언…민주당 “연대 안 해”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것을 우려해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부산은 조 전 장관의 고향이다. 그는 총선 목표가 윤 대통령 탄핵이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국민이 3년 반 동안 더 보고 난 뒤 교체하겠다고 하면 그 뜻에 따라야 하고,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고 생각하면 또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비례정당에 합류하기 보다는 4년 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자매’ 정당으로 3석을 얻은 열린민주당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조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야합으로 관철하려 하는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틈이 보인다”며 “민주당 지원으로 조씨는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 - 4면, 조국, 끝내 신당 창당 “검찰독재 종식... 민주당보다 더 싸우겠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표방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아랑곳없이 선거판에 뛰어들어 정권 타도를 외치는 ‘필사의 줄타기’가 시작됐다.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민주당은 또다시 ‘조국의 강’에 갇힐 수도 있는 악재를 만났다.

반면 여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소도(蘇塗·죄인이 도망쳐도 붙잡아가지 못하는 신성한 곳)나”며 “총선 출마를 한다면 검찰독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도망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 - 5면, ‘2심 실행’ 조국, 창당 선언… 與 “뒷문으로 의원 노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옥중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정치 행보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지난 총선 때 김의겸, 최강욱 후보 등을 앞세워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원내에 입성했던 열린민주당과 같은 모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서울대에서 형법 교수를 하신 분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가 됐든 다 같이 연대해야 된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 조선일보

### - 8면, 이런 선거제… 1·2심 유죄 받은 조국도 신당 창당한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출간한 책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해 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기소됐지만 4년 2개월째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총선 출마에 법적 제한이 없다. 하지만 당선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조국 출마는 법 농락” “재판을 지연한 법원도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중앙일보

### - 12면, 조국, 신당 창당 선언...여당 “후안무치, 반성부터 하라”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도 부산 출마 의사를 묻자 “윤석열 정권 대 반(反)윤석열 정권’ 일 대 일 구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지역구 출마나 비례연합 정당 등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당선자 배출이 주된 목적이라는 의미다. 21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따로 나선 열린민주당이 강성 친문 지지층을 흡수해 최강욱 등 3명의 당선자를 냈다.

민주당에선 “정권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정청래 최고위원)라는 반응과 “조국 출마 자체가 민주당에겐 중도층 이탈 요인”(핵심 당직자)이라는 반응이 교차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위선과 불공정에 대한 반성과 자숙”, 유승민 전 의원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비판했다.

---

## 2. 윤석열 부산 방문

윤석열은 13일 “서울과 부산을 양극 체제로 키우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데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선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에서 비수도권 최초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 민심 훑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 경향신문

### - 1면, 69일 만에 또 부산 간 윤 대통령 “서울과 양극 체제로 천지개벽”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부산을 양극 체제로서 저희가 천지개벽시켜야 한다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이곳 부산”이라면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부산 발전의 비전으로는 물류와 금융,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행보는 확대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을 시작으로 영남과 충청 등 여러 지역으로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를 넓혀갈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현장 행보를 넓힌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개최와 맞물려 전통시장 방문 등 민심 접촉점을 늘리는 행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앞서 10차례 민생토론회를 모두 수도권에서 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부동산 규제 철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강조한 것 역시 총선용 행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한겨레

### - 1면, “부산 특별법 제정” 총선 앞 선심성 지역공약 쏟아낸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함께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금융 물류특구 지정 △산업은행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 금융지원 확대 △원도심인 동구·북항 국제업무지구로 발전 △케이팝 고교, 외국 교육기관 부산 설립·유치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사직구장·구덕운동장 재개발 지원 등을 두루 거론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 경청”을 이유라고 포장하지만, 선심성 지역공약 보따리 풀기라는 지적과 함께 선거 중립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인수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이날 한겨레에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김포시 등 서울 인근 지역을 서울로 편입한다는 발상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이 정부부처 장관들까지 데리고 와서 민생토론회라는 걸 개최하는 건 두달 남긴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대통령 취임 때부터 밝혀온 공약인데 그간 국회에서 막혀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국일보

### - 1면, '노골적 총선 행보' 지적에도... 윤 대통령, 부산부터 훔쳤다

지난해 12월 6일 정부 부처 장관들과 대기업 총수들을 이끌고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찾은 지 2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고, 두 달 후인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연장선이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설 민심을 들어보면 ‘이만하면 됐다’는 대구·경북(TK) 민심과 달리 PK에선 ‘부족하지만 될 더 바라겠느냐’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동아일보

### - 5면, 총선 57일 앞 부산 찾은尹, 물류·금융·문화 등 지원 약속 쏟아내

“한국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은 반경 100km 이내에 첨단산업 단지과 기업들이 준비하고 금융이나 물류만 잘 보완하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 - 4면, **尹 “부산 해운대에 제2판교… 구덕운동장도 재개발”**

정부는 사업성 문제로 표류하던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이나 주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도 적극 지원한다

### 중앙일보

#### - 3면, **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즉각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부 기업의 노력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천하장사를 지낸 이만기 인제대 교수의 사회로 시민 패널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과 부산을 자석에 빗대어 “자석이 양극으로 있으면 자석 주변에도 철가루가 있지만, 양쪽 균형 때문에 가운데에서도 그 위치를 지킨다”며 “서울·부산을 양극 체제로 천지개벽시켜야 하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250여 년의 전통의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 C.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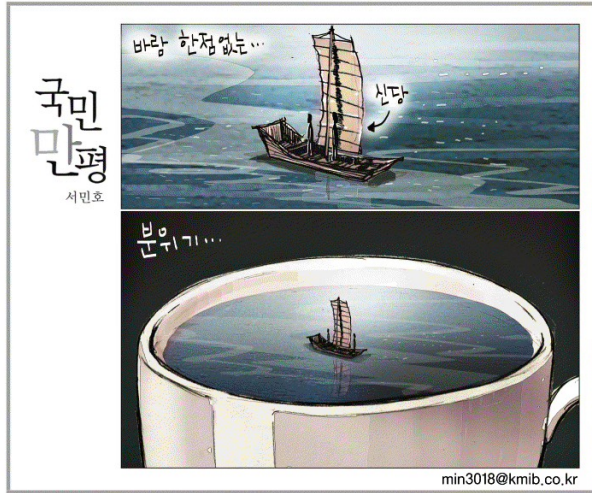
한국일보

2024-02-14 (수) a25면



국민일보

2024-02-14 (수) 002면



경향신문

2024-02-14 (수) 003면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서울신문

2024-02-14 (수) 025면



중앙일보

2024-02-14 (수) 030면

박용석 만평



parkys@joongang.co.kr